

민주 독주 속 '호남 풀뿌리 2당' 바른미래나 평화당이나

광주·전남 지방선거 관련포인트

6·1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11일 광주·전남지역 곳곳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속에서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비랑 끝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에 이어 어느 정당이 선전을 할지, 후보자 간 술한 고소·고발에 따른 재선거 여부 등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호남 풀뿌리 제2당은 누구=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조심스럽게 접쳐지면서 야당 간 '제2정당 쟁탈전'도 치열하다.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제2당의 지위를 선점하는 것은 이후 국회의원 선거와 정계 개편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내는 등 옛 국민의당의 텃밭을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민주평화당이 연일 지도부를 호남에 배치해 대대적인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호남 성적표'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호남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수의 당선자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20~30%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당 득표율로 선출되는 광역의회·기초의회 비례대표도 제2정당이 누구인지를 가르게 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 정당이 모든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독점할 수 없는 탓에 남은 의석을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당의 위상이 달라진다. 과거 민주당이 일당 독점의 지위를 누리던 시절엔 진보정당이 비례의석을 대부분 차지했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비례 3석 중 2석, 전남도의회는 비례 6석 중 4석을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1석과 2석을 차지하기 위한 야당 간 경쟁이 더욱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술한 고소·고발, 법정다툼과 재선거로 이어지나=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각종 고소·고발로 향후 법정다툼과 이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도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사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미투, 자라담 회동, 인사청탁 뇌물수수, 마약커피 복용, 불법 재산 증식, 성폭행, 금품살포, 군납품 비리, 혼외자 등 술한 의혹이 쏟아졌고 이에 따른 후보 간 고소·고발도 빈번했다. 11일 하루만 전남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건, 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3건, 기초의원 선거 관련이 2건이었다.

이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은 탓에 당 대당 대결, 정책 경쟁보다는 선거 중반부터는 상대 후보 개인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는 '네거티브'식 선거가 진행된 탓이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면 상대가 같은 방식으로 반격하는 폭로전이 전개되면서 선거 이후에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선거구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각종 의혹과 폭로와 관련,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당선 이후에도 법정 다툼을 벌이거나 경우에 따라 재선거

고소·고발 난무 재선거 가능성도

3선 광주시교육감 탄생 여부 주목

후보 단일화 효과 시선 집중

거를 치러야 하는 '지방선거 병패'가 되풀이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최소 4~5곳에서는 재선거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재선거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선 교육감 탄생하나=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장휘국 전 교육감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 중인 이정선, 최영태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장 교육감에 맞서는 광주교대 출신의 이정선 후보,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 단일후보로 선출된 최영태 후보(전대 교수)의 반격도 만만찮다.

진보성향의 전남교육감이 처음으로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전남교육감 선거는 목포대 총장 출신의 고석규 후보, 나주교육감 출신의 오인성 후보, 전교조(전국) 위원장 출신의 장석용 후보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형세다. 경력과 공약 등으로 보면, 장 후보가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되고 후호, 오 후보 역시 범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장 후보가 전남교육의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면, 상대적으로 고 후보와 오 후보는 안정감있게 교육정을 이끌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연립 선거구 결과는? =광주 서구에서 지방선거 막판 더욱 돈독해진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간 연대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관심 포인트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이성일 후보는 무소속 임우진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사퇴했다.

지역 정가에서 당내 경선 후보들 간 또는 무소속 후보들 간 단일화는 많았지만 현역 기초단체장 무소속 후보와 특정 정당 후보 간 단일화는 이례적인 일여서 주목을 받았다. 또 무소속 임 후보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는 선거 막판 합동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무소속 출마를 한 임 후보는 '당선 뒤 민주당 입당'을 시사하고 있지만 선거 막판 계속된 민주평화당과의 연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 후보들 약진할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여성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질지도 관심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여성 후보는 모두 209명. 전체 후보 970명 가운데 21.5%다. 입후보한 5명 중 1명 풀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17.7%와 비교해 약 4%포인트 늘었지만, 대부분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해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73명 중 여성은 영암군수 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가 유일하다. 이어 광주시의회 후보 47명 가운데 여성은 18명(38.2%), 전남도의회 후보 115명 중 여성은 5명(4.3%)이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민주당이 광주 4개 선거구에 여성 전용 선거구를 도입하면서 여성 시의원 탄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kwangju.co.kr



투표용지 배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1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태학교에 체육관에서 복수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투표소 담당직원들이 각 투표소로 전달될 투표용지 갯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의회 또 민주 독점 이뤄지나

"씩씩이" "다당화" 지지 호소

지방의회 독식 우려 목소리 속

비민주당 당선 의석수 주목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의회의 '일당 독점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일당 독점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다. 특정 정당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모두 차지하는 이른바 '씩씩이 선거'가 되풀이되다 보니, 광역·기초 단체장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기능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혁신을 가로막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의도 활발하지만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공명볼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다 보니, 지방의회 구성이 또다시 일당 독점으로 마무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광주 시의원 출마자는 여·야, 무소속 통틀어 지역구 47명, 비례대표 12명 등 모두 59명이다. 의석 수가 제7대에 비해 한 석 증가한 23석(비례 3석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지역구 2.35대 1, 전체 2.56대 1이다.

광주시의회는 ▲1대에 재적 23명 중 19명이 신민당, 4명은 무소속 ▲2대는 26명 중 민주당 25명, 민자당(비례) 1명 ▲3대는 17명 중 국민의회의 16명, 자민련(비례) 1명 ▲4대는 1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18명, 민노당(비례) 1명 ▲5대는 19명 중 민주당 18명, 열린우리당(비례) 1명 ▲6대는 22명 중 민주당 21명, 민노당(비례) 1명 등이다. 7대 의회도 22명 중 민주당 12명, 민평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이처럼 광주시의회는 그동안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광주시의회 선거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9명이 출마한 바른미래당은 3~4석, 12명의 후보를 낸 민주평화당은 5~6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민중당은 현역 시의원과 전직 구의회 부의장, 재선 구의원 등을 내세워 최소 1~2석을 자신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민주당 독식이 예상된다.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는 민주당 잔치였다. 지난 4년 전 제6회 선거에서는 지역구 도의원 5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48명, 무소속 4명으로 1당 독점이었다. 비례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1명씩 선출됐다. 앞서 제5회 때도 지역구 의원 51명 중 민주당 45명, 민노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민주당이 휩쓸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전남도의원 52석씩씩이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평화당은 기초단체장 격전지인 목포와 신안, 여수 등에서 10석 안팎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보성향 정당의 선전도 관심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정의당과 민중당은 단체장보다 지방의회 선거에 올인했다. 정의당은 전략적 선택을 했다. 될 곳에만 후보를 냈다. 그 결과 자체 판세분석에서 영암2선거구 이보라미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비례대표 1석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중당도 최소 2석을 노리고 있다. 장흥1선거구 박형대 후보와 영광2선거구 오미화 후보의 도의회 입성을 기대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향을 바꿀 땐



깜박여 주세요!

방향지시등 켜기는 안전을 위한 의무입니다
방향지시등 점등만으로 난폭, 보복운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은 진로변경 시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일반도로 30m 전, 고속도로 100m 전 작동해야 합니다.

좌·우회전 시 신호대기 중에도 켜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부과(승용차 기준)

